이 세 걸
쓰레기문제해결을위한시민운동협의회
사업부장

1회용 합성수지용기 규제제도 아직도 갈 길은 멀다

2003년 7월 1회용 합성수지용기 사용규제제도가 확대되었다. 이제는 음식점에서 외부로 반출하는 1회용합성수지도시락용기도 사용이 금지된다.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여전히 반쪽규제라 제도시행에 차질이 예상된다. 아직도 일부품목은 연차별 줄이기를 적용하고 대규모 점포내 식품제조가공업이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허가를 받은 사업장에 한해서 합성수지용기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조 10항 '합성수지로 제조된 1회용도시락용기'의 정의에 대한 사회적인 논란도 장애요인 중 하나이다. 물론 합성수지도시락용기사용은 전면적으로 금지된다.

환경문제를 해결하고자 제정한 환경규제제도가 올바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보다 명확한 제도적용이 필요하다. 제도의 형평성논란을 불식시키고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도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

연차별 줄이기를 적용하는 품목들과 예외규정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들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시민건강과 밀접히 관련된 식품용기라는 점에서 엄격한 제도적용이 필요하다. 결코 쉽지는 않은 일이다. 하지만 그동안 1회용합성수지용기를 줄이기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에서 희망을 엿볼 수 있다.

합성수지용기 사용규제제도 확대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합성수지용기는 분해기간이 500년 이상 걸리는 난분해성물질이라 오랜 기간동안 자연생태계와 시민들의 삶을 위협한다. 잘 썩지 않고 장기간동안 침출수를 유발해 매립지안정화를 저해하고 토양과 수질, 지하수를 오염시켜 자연과 삶터를 멍들게 한다. 소각에 따른 유해도 마찬가지이다. 미국EPA와 세계야생생물보호기금, 일본국립의약품식품위생연구소에서 환경호르몬 추정물질로 분류하는 스티렌다이머와 트라이머가 유출될 가능성도 있어 엄격히 규제해야 함이 마땅하다. 비록 합성수지용기가 타 재질과 비교해 가볍고 보관과 이동이 편리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제작이 쉽다고는 하나 자손만대에 걸쳐 평생동안 자연에게 빌려 쓸 쾌적한 삶터와는 바꿀 수 없다.

그리고 건강을 포기할 수는 없다. 이는 합성수지용기의 생산자나 판매자도 부인하지 않을 것

이다. 최근 일부기업에서 합성수지용기의 사용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기업이라면 합성수지용기의 재질대체에 따른 경제적인 이윤도 따질 것이다. 하지만 이를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지나치게 강조해서도 안 된다.

합성수지용기 규제제도를 반대하는 일부 기업의 주된 논리가 합성수지용기의 재질대체로 가격이 인상해 경영에 손실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소규모 상인도 손해 보는 장사를 안 한다고 하는데 국내의 대표적인 도시락업체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기존에 해왔던 틀을 깨고 새로운 것을 도입하자니 보통일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과연 일부 기업이 우려하는 만큼 막대한 경영손실이 있을까? 지금시기 합성수지용기의 재질대체로 최고 40원의 가격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는 제도시행 전후의 변화된 상황을 충분히 고려치 않은 발상이다. 95년 합성수지용기 규제제도 시행 이후 그때와 지금은 많이 변했다.

이미 지난 시기 오랫동안 대체용기가 유통돼 보편화되고 있다. 그리고 올 7월 규제제도의 확대로 1회용합성수지도시락용기의 사용이 전면적으로 금지되면서 대체용기의 공급량이 늘어나 가격차이는 더욱더 낮아질 것이다. 경제논리로 합성수지용기의 사용을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단정하건데 소비자들은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대체재질의 사용에 따른 추가비용을 환경오염개선비용 혹은 위험회피비용으로 받아들일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다. 이미 지난 시기 쇼핑봉투 보증금제도에 따라 1회용품사용을 줄이기 위해 최고 100원까지 추가부담을 하며 성실히 제도시행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은 이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이제 우리사회는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에 환경과 시민건강을 방치하지 말고 합성수지용기사용의 열쇠를 소비자의 몫으로 돌려야 한다. 사실 일부 기업은 이러한 점을 관가해 합성수지용기의 사용을 주장한다고 볼 수 있다. 합성수지용기를 사용하느냐, 않느냐는 그 동안 일상적으로 합성수지용기를 사용하며 유해환경으로부터 실질적인 영향을 받아 온 소비자가 주가 되어 판단할 사항이다. 또한, 기업의 경제논리가 아니라 사회공익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지난 시기 갤럽여론조사 결과 90%이상의 시민이 1회용품 규제에 찬성하며 1회용합성수지용기의 사용을 반대해왔다는 사실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95년 이후 많은 기업이 규제제도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기업의 자기성찰로 공동체의 끈을 놓지 말아야 기업도 발전한다. 합성수지용기 사용규제 제도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결과물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 모든 것을 부인하며 따를 수 없다고 버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는 우리사회에 대한 도전이며 공동체를 파괴하는 기업이기주의에 불과하다. 여타 기업과 마찬가지로 하루빨리 제도시행에 참여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이며 친환경적인 기업으로 거듭나는 일이다. 아울러 더욱 발전적인 논의가 사회저변까지 풍부히 이뤄져 합성수지용기 사용이 전면적으로 금지되기를 기대한다. ko